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세기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의 표정은 밝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동성명의 제3항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미북 정상회담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 자체로 큰 성과이며, 미북 간의 적대 관계를 70년 만에 종식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에는 세계의 여론이 일치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국민 여론은 그 이후 북한의 어둡게하고 미적미적하는 태도로 보아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회의적이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

청춘 특·특



김신의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2년

최근 광주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떠오르는 화두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광주형 일자리’란 친환경차 생산 설비를 광주에서 조성 중인 빛그린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대, 기아 자동차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 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임금을 낮추고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정책인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사측은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고, 지

한 시대가 가고 있다

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의적 시각의 밑바탕에는 그동안 미국 측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 내용에 명기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VID 문구를 합의문에 왜 포함시키지 못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맞섰다.

한편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 하나가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합의문 전문(前文)에 나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합의사항을 선언한다’고 한 그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건 하나하나보다는 포괄적인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표현이 더 함축적이고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의혹의 눈으로 보면 의혹은 더욱더 커 보이고 신뢰와 긍정의 눈으로 보면 신뢰와 긍정의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문면에 있고 없음이나 눈앞의 상황만을 놓고 선부를 판단을 하기보다는 크고 깊은 시야와 사려로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최고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정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감축 없이 속이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포기하게 하는 기만전술에 세계가 농락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이 일단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 이상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힘이 앞과 뒤, 위와 아래, 좌와 우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그것을 과연 거스를 수 있을까. 한두 번, 또는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온 세계와 온 인류를 감쪽같이 다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과 그로부터 1주일 뒤에 있었던 6·19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일련의 행보로 보아 남북 사이에도 이미 협력 속의 체제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북한의 역사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는 확산과 수렴, 우여와 곡절을 거치면서도 마침내 정

(正)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나는 믿는다. 반공이 완강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러한 가운데, 6월 13일에 치러진 한국의 지방 선거에서 한국의 보수 야당은 패배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담하게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여당의 압승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한국의 보수에 대한 절망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공 완장’ 이제는 버릴 때다

시대와 세계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0년대식 냉전 시대 안보관과 대북관 수준에서 중북 몰이에 집착하고 있던 말인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반공을 내세워 간첩을 조작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용공 좌빨’로 몰던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반공 완장을 찬 채 남북 및 북미 협상의 발목만 잡으면 반타격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갔다. 시대에 뒤쳐진 과거 세력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남아 빠진 지역주의도 함께 갔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오고 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깨어 있는 자 살아남을 것이요, 시대의 징표에 눈 감고 있는 자, 버림받고 낙오할 것이다.

청년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갈망한다

방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 해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문제 해결책으로 써 더할 나위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5.6%나 낮은 광주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광주를 떠난 주민 8000명 가운데 3분의 2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진 청년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정책처럼 보인다.

새로운 민선 7기를 시작한 이용섭 광주시장도 7대 정책 방향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혁신 과제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해결’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다고 한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정에 대한 애교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좋은 취지가 끝은 아니다. 노·사·민·정간의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은 과제가 현실에 놓여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노조 측에서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지적하며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강행할 경우 2018년 입투와 연계하여 총력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돼 공장 가동 이후 생산성을 확인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동차 생산 노하우를 가진 현대차는 자본 참여와 함께 위탁 생산만 할 뿐, 경영 참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대한 예비 노동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을 뿐, 실제 그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가 경영 주체인 점도 시장 원리 작동이 효율적이라는 검증된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한 발을 내디뎠다. 정부도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제계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제 공은 노동계, 특히 현대차 노조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대차 노조는 여러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금 절반 삭감이라는 큰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노조의 우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려를 가득 떠안은 도전이라도 해야 할 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다. 노조도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줄기 기대해본다.

전남도의회의 새로운 변화 기대된다

다양성의 시대라는 말을 절로 실감하게 된다.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직업별로는 기초·광역의원, 정장민, 전문직, 자영업, 농축수산업, 회사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하게 포진되어, 각계 각층의 도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여기에 40%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여성 의원 비율 또한 제11대 의회보다 3명 더 늘어난 8명이다.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도는 F1대회, 사파리 아일랜드, 한옥마을, 개방화·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면 현안인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는 그동안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이렇게 낳은 아이가 우리 지역에서 교육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지자체마다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현재의 경기 불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다.

전남 발전의 기틀이 되어줄 한국전력과 연계한 에너지산업의 육성, 농도(農道) 전남의 사활이 걸린 스마트팜 도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이와 같이 산적한 전남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남도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11대 의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도의원들이 도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면 4년 후 ‘전남 행복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아말로 도민들이 기대하는 도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지방선거에서 한 표 한 표를 행사한 우리 도민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가로 기억될 의의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9일에 한 번꼴로 아고라광장에서 아테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회를 열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고대 아테네 시민들처럼 만나 제쳐두고 정치에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요즘, 내 지역 내 살림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고 있는지 도민들이는 여겨 봐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도민 한 명 한 명이 전남의 주인이기에, 앞으로 4년 동안 손님이 아닌 주인의 권리를堂堂하게 행사해줄 것 간절히 바란다.

社說

일당 독점 시도의회 거수기에 그쳐선 안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새 집행부 출범에 이어 이번 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잇따라 개원하면서 민선 7기가 본격 출항한다. 하지만 원 구성 과정에서 자리 다툼과 특정 정당의 일방통행 등, 구태가 재현되면서 일당 독점의 폐해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제8대 의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신임 의장단 선출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23명의 시의원 중 22명을 장악한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놓고 자기들끼리 편이 갈려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개원식까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오전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역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 담합과 임기 나눠 먹기로 빈축을 샀다. 의장단 구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구태는 지방 의회에 대한 주

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시도 행정에 대한 정교한 검증과 감시가 사라지면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질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거수기에 그치지 않도록 출발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고쳐내고 민생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수 정당과도 상생의 협치를 도모하고 정당보다는 지역과 지역민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미적미적’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촉 서둘러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위 조직 체계를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 규명 활동을 하는데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려워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맡은 조사 1~3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상 규명의 범위’ 일곱 가지 항목을 나눠서 규명한다. 조사1과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헬기 사격을 포함한 최초 발표와 집단 발표 책임자 규명 등을 맡는다.

2과에서는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령부와 국방부 등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 사항, 진실 왜곡 및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

한 집단학살지·암매장지의 소재와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소재 등을 담당한다. 3과에서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그 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모두 아홉 명으로 국회의장이 한 명을, 여당과 야당이 네 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 공천 등으로 현재까지 조사위원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 위촉이 지연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5·18 진상 규명은 이번이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공천을 끝내고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최초 발표 명령자, 헬기 기총사, 암매장 및 성폭행 같은 여성들에 가해진 인권 유린 등 그날의 진실을 낱알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매달 6000여 만 원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특수활동비로 특활비를 줬었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운영위원장이었던 시절 받은 국회대책비(특활비) 월 4000만~5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고, 아내가 이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회의 특활비는 지난 2015년 5월 ‘성원중리스트’ 수사를 받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발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전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기탁금을 성원중 전 경남기업 회장에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비자금 출처로 특활비를 꼽았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운영위원장이었던 시절 받은 국회대책비(특활비) 월 4000만~5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고, 아내가 이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

비슷한 시기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민주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 지급 대상·방법·시기는 각 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 서류에 대한 감사원 지침은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활비가 ‘논란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온 이유다.

비슷한 시기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민주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 지급 대상·방법·시기는 각 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 서류에 대한 감사원 지침은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활비가 ‘논란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온 이유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 써 오다 문제가 됐으며 국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독특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기획관 리국	227-9600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업무국	220-055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기자단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